

사회

청소년 근로자들이 운다

하 대책은 없나

최저임금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현장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할 조정·중재기구 서둘러야

“최저임금 기준 업종·연령따라 유연화” 지적도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1일 청소년 고용사업장 일제 조사를 앞두고 업주나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자는 10여 명에 불과했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은 영세점포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이들 업주나 업체가 청소년의 법적 권리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청소년의 최저임금 기준이 성인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불만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모(51)씨는 “힘든 노동을 하는 성인과 간단한 서비스를 하는 청소년의 최저임금이 같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획일적인 정책이 소규모 업주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도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복합영

화상영관이나 대규모 식당, 유명 편의점 등에서도 최저임금은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유급휴가 등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마당에 PC방이나 식당 등 영세 점포에서는 불·탈법이 더욱 만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점포를 유지하기도 힘든 이들 영세점포 업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업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불·탈법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계해 청소년들의 신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제절차가 없어 성인과 동등한 과정을 거쳐 업주와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은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1천500원이 부족한 시급 2천500원을 받고 광주지역

한 PC방에서 일한 이모(21)씨는 “주인 아저씨가 일할 때는 조용하다니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다”며 “시급 3천800원으로 합의를 봤으며, 식사비 등을 제외한다고 해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 동반해 노동청에서 업주와 면담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병훈 광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은 “업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약자인 청소년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권리를 찾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증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물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도·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9억 공사 전산오류로 계약해지

광주경찰청 재선정...해약 업체 “어처구니 없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모 전부경찰대 소속의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산오류로 인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져 반축을 사고 있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광주지역 모 전경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된 T사와의 계약을 깨고 J사를 시공사로 재선정했다. 광주경찰청은 이에 앞서 숙소 리모델링 공사 입찰공고를 낸 뒤 조달청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9억2천만원의 입찰가를 써낸 T사와 지난달 30일 공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9일 뒤인 지난 8일 돌연 T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달청의 입찰시스템 오류로 인해 입찰하한찰이 잘못 산출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입찰하한찰은 예비공사가격의 평균값으로, 이 평균값 이상을 써낸 입찰자 가운데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게 된다. 현재 10억 미만의 공사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낙찰하한찰 87.745% 이상 업체 가운데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T사는 이번 입찰에서 지정된 낙찰하한찰보다 1% 낮은 86.

745%(9억2천만원)를 써냈고, 광주경찰청은 뒤늦게 이 수치가 잘못 적용됐음을 알고 재선정 작업을 벌인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T사 측에 전산오류에 따른 해약 사유를 설명했고, 업체에서도 이를 수긍했다”며 “이미 계약을 했어도 낙찰하한찰이 잘못 적용됐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T사 관계자는 “이번 재선정 소동은 전산시스템 만을 믿은 발주처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며 “이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찰 시스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범칙 신고하세요”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청사에서 ‘서민생활보호 강화’를 위한 범칙신고요원 발대식을 갖고 요원들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범칙신고요원은 요구르트·신문 배달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3천194명으로 구성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기도박 40대 검거 영광경찰은 13일 특수렌즈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강모(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12일 영광군 법성면 한모(41)씨의 사무실에서 특수제작된 콘택트렌즈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된 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해 관돈 3천900만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관을 벌인 혐의다. /영광=조희성기자 ischo@

美·日 포르노업체 한국 네티즌 고소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며 1만명에 가까운 한국 네티즌을 고소해 적잖은 파장을 예고.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 미·일 업체는 최근 국내 A법무법인을 선임, 인터넷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해비 업로더’의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 ○A법인은 해당 업체들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수도권지역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을 냈으며,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쌀값 폭락...농민들 화났다

北 지원 법제화 등 대책 촉구...출하 거부 예고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과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통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남연맹은 14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한나라당 전남도당 사무실 앞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재고량 누적으로 쌀값이 올라야 할 시기에 값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에 5만4천원에 거래되던 쌀이 3만9천원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 ‘시장왜곡’ 논리를 앞세워 수수방관하다 2008년산 쌀 10만을 매일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역농협의 재고물량을 농협중앙회로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15일 입진 각 농민 기원제를 시작으로 9월 농민대회와 쌀 출하거부, 11월 농민 총궐기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간다고 경고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중국인이 20억대 환치기

인터넷 쇼핑물에 ‘환전 광고’를 내고 20억원대 환치기를 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20억3천만원에 환치기 한 중국인 유모(2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씨는 지난 2007년 5월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정상적인 송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환치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중국산 김치 51t 국산으로 속여 팔아

나주 유통업체 대표 검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3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나주지역 김치 유통업체 대표 A(50)씨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전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인천시 한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사들인 중국산 배추김치 66톤 중 51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광주와 전남·북 지역 집단급식소와 음

식점 등에 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kg 상자당 7천500~8천500원에 사들인 중국산 김치를 1만1천~1만8천원에 판매해 2천3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국산 배추김치의 시장 유통가격은 10kg 상자당 2만~2만5천원이다. A씨는 중국산 김치에 배추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부착해 재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Ondolnara featuring various furniture items like beds and sofa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ony VAIO laptops, featuring a woman and a laptop, with the slogan 'My Style My VAIO' and contact details.